

민주, '11월 위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 1심 선고 검찰독재대책위 "사건 조작됐다" '집권플랜' 가동...대선 준비 시동 이 대표 비전 '먹사니즘' 정책 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예정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사건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간담회를 열어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고, 지도부는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11월 위기설'을 희석하는 모양새다.

당 '검독위'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검찰공

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검찰독재국으로 전락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하며 심지어 참고인을 협박해 거짓 증언을 끌어낸 사례가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예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고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증거를 편집하고 참고인 진술을 왜곡하는 등 악의적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증거다. 검찰이 정적제거 도구로 전락하고, 수사 방식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독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사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아닌가 싶다"고 가세했다.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증교사 등 검찰이 과잉 수사 기소가 문제다.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친야 성향의 언론인 출신 유튜브인 박효석 빨간야재 대표가 맡았다.

박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열거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부각하는 등 야당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 삼

았다.

전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 때 방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다시 이 대표의 같은 재판을 맡았다"며 "두 사건이 피고인만 다르고 쟁점은 사실상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대표는 이미 유죄의 심정을 가진 판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판을 되풀이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재판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서 법관의 사전 예단을 배제하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원칙이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예단을 갖고 있는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것만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는 집권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대표 중심의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집권플랜본부는 이 대표의 대권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 대표 핵심 비전인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을 구현할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풀을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상황본부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 본부, 당원주권 본부와 모범당원 정권 교체위원회 등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됐다.

김민석 총괄본부장은 "오늘의 싸움 이후 내일의 집권을 향한 정권교체 고속도로와 국정성공 고속도로의 구간별 세부계획 작성과 공사를 시작했다"며 "집권 담론을 선도하고 당 내외 참여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호 "전남, 정부 보건의료 R&D 불모지"

이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2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전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연구·개발) 분야 투자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지만, 전남은 지난해 3개 과제 4억7500만원,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원이 집행됐다"며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꼬집었다.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R&D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국 17개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는 355



개, 예산은 2084억이었다"며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20년 1개 과제 2억 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계원, 국감서 문화·체육 현안 '송곳 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울·사진)이 국감기간 문화·체육 현안에 대한 꼼꼼한 자료 준비와 날카로운 지적들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문화체육부 국감에서 유인촌 장관에게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정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10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국감에선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 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14개 후보지 안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이 있는데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감에선 정



소년들의 불법도박 유형이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변했다며 철저한 예방 대책을 주문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저소득·유·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이용률이 떨어져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체육계의 공정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바로 잡혀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 26일 장외 집회 "윤석열 끌어내려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오는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여 불의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며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 없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놀이'를 끝장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명태군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가치와 규범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며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정권을 함께 운영하는 권력 공동체이며 앞으로 자기 지분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헌법상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장외 집회와 관련, "검찰 해체, 윤석열 정권 탄핵 선포 대회는 조국혁신당의 자체 집회"라며 "전국 당원들과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도 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밝은 표정의 이재명-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서로 마주보며 미소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 특별감찰관 임명 공개 요구...대통령실 압박

"김 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해야" '김건희 특검법' 처리 여부도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한(윤석열-한동훈) 면담 이후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23일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면담에서 김 여사 문제 관련 3가지 요구(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의혹 사항 별명 및 해소)는 물론 특별감찰관 임명 등 한 대표의 건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이후 첫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다음달 15일 나올 예정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15일 나온다.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현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모습을 할 것"이라며 "그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델라스(소설 속 유포피아)'를 떠나듯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며 "지금 변화하고 쇠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친한계 인사 22명과 긴급 만찬 회동에 나서 윤 대통령과 면담 결과를 공유하고 내부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가 결속하면 향후 김건희 특검법 대표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 당정 관계 악화는 물론 탄핵 정국을 열어줬다는 보수진영내 정치적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다만 한 대표가 여론 흐름에 따라 독소조항을 제거한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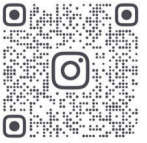
이재명 대표와 2차 회동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jnilbo.com